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이해 · 구현 책임자”

전북시군의장협의회, 민주 최고위원 한병도 후보 지지 선언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병도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정부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으며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전북 몫 찾기에 앞

장 서고 전북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등 주요 사업들을 쟁기고 지원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의장협의회는 “한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법률안 통과에 어느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당정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고 빠른 복구지원에 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전북 발전을 이끌 책임자가 한병도 후보임을 확신한다”면서 “도민과 민주당 당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남원군과 순창군 의회 의장이 이날 수자원공사를 향의 방문할 예정이다”며 “그 후 결과를 가지고 최근 댐수위 조절실패로 하류지역에 큰 침수피해를 입힌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복구와 보상 문제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번 피해는 재해가 아니다”

강용구 도의원, 보상 촉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댐 홍수피해 책임 소재를 ‘기록적인 폭우’로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뿔났다.

13일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교육위) 의원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댐 홍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서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매뉴얼 지침대로 방류’했다는 핑계로 일관해 피해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장마가 유례없이 길어진 상황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공이 저수율과 방류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피해지역이 최소화 됐을 것”이라며 수공의 안일한 판단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피해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수공은 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인재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 주민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수공의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에 문제를 삼았는데 “수공이 일방적으로 방류 계획을 결정하고 사후 통보해 주민들은 수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역민들의 피해가 복구되기 전까지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면서 “특히 남원을 비롯해 임실과 순창 그리고 전남 구례 등 피해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유호상 기자



“주민소환청구인 서명작업 돌입”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동료 의원간의 불륜 사건 및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사태의 책임을 물어 온주현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호우피해 지역 신속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 지원금액 확대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호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심한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공동건의서에서 17명의 시도지사들은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지방정부들은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이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의협 집단휴진, 의사 사명에 위배”

박능후 복지부장관 “전국 24시 비상진료상황실 마련… 긴급상황 대비”

정부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회(의협) 등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유감을 표했다. 대와 여지는 남겼으나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기가 생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제안한 협의회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거듭해 제안했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꺼져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항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은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면서 “춘각을 다루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철폐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약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등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는 정부와 의협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고자 설명했다.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나 수가 인상이나 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냐 차이가 있으니 간극을 좁힐 방안을 협의체 등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엮이는 문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 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일 병원 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응급 진료상황도 응급 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뉴스

군산항 위기 극복 해법은?... 도, 항만관계자들과 간담회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노력키로

전북도가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항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군산시, 군산항만물류협회, 서부항운노조, CJ대 한동운, 석도국제해리, 한솔로지스틱스 등 14개 기관, 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군산항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입 창구 및 중국 카페티 여객선 운항 등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설상가상 올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군산항 관계자 및 종사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산-석도간 국제여객선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월부터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했고 화물운송도 주 6회에서 3회로 줄여 운영하는 등 적자가 누적돼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전북도는 선사, 부두운영사, 하역사, 항운노조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대책 및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우선 도는 검역 및 통관시스템 보안을 위해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항만시설사용료, 임대료, 항비 감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규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시설 개선과 특수장차량, 냉동창고, 복합 자동차 단지 등 연계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산시, 군산해수청과 협력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 · 순창 기초의원들,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대전 본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에 수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남원시 의원들은 순창군의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을 만나 공사가 “계속된 호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해 홍수 조절에 실패하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류지역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섬진강댐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은 곧이어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임을 성토하고, 책임인정, 주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남원시의원들은 8월 초에 비교하면 16배가 넘고 전일과 비교

해도 4배가 넘는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 사태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며, 공사 및 환경부가 피해 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광양, 하동)은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전례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희재 남원시의회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전하며, “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국 순창군의회장은 “이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피해 보상과 호우 관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기두 · 이양원 기자

한원수 도의원-임실군의원들 수공 섬진강댐관리단 항의 방문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는 지난 11일 한원수 전북도의회 의원과 함께 수공 섬진강댐관리단을 항의 방문하여 물관리 당국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진남근 의장은 “섬진강 최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은 기나긴 장마기간 동안 오히려 저수량을 늘려왔으며, 마침내 지난 8월 최대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임실, 순창, 남원, 구례, 곡성, 하동 등 강 하류의 유래 없는 피해를 키운 인재임에도 댐관리단은 침수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돌리고 있다”며 항의했다.

임실군의회는 수자원 공사는 금번 재난이 물관리에 실패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실=진홍영기자